

종합

전남 지자체 '은퇴자 모시기' 뜨겁다

귀농인 조례 제정·정착촌 조성·자녀 학자금 지원 등 총력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전남 자치단체들이 조기 퇴직이나 은퇴 등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려는 '도시민 모시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지자체들은 앞다퉈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데 이어 정착촌 조성, 농지구매자금 보조·정착금 지급,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구체적인 유치책을 쏟아내고 있다.

영광군은 13일 귀농·귀촌인 조례를 공포했다. 군은 이 조례를 바탕으로 귀농인 유치를

를 위해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귀농인 지원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군청과 각 읍·면사무소에 귀농·귀촌인 상담실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농지 구매자금, 영농정착금 등 각종 보조금 또는 용자금에 물론 주택 수리비,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자녀 학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를 제정한 장흥군은 서울에서 귀농 홍보전을 펼치는가 하면 귀농 희망자에게 작목별 맞춤형 영농 교

육을 해주고 1인당 최고 3000만원의 영농 창업 자금 등을 지원해 주고 있다.

군은 도시민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안양면 일대 231만㎡에 14개 지구 2500여 가구가 살 수 있는 귀농 마을 '로하스 타운'을 조성 중이다.

담양군은 전일 이사비,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보전, 자동차 번호판 무료교체 등 지원을 하고 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보육료와 유치원비,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고등학생, 대학생과 기술사 입소생 등에 인센티브도 주고 있다.

지난 2007년 전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도시민유치 프로그램 지원 시범사업 대상 시·군으로 선정된 곡성군은 도시민정착지원센터를 개설하고 예비 귀농인을 위한 '귀농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다. 군이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귀농인 전원마을은 85%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논충에 뿌리를 내린 귀농인들도 도시민들의 정착을 돕고 있다. 선배 귀농인들의 모임인 귀농인협회는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의 멘토 역할을 하면서 이들이 낯선 지역에 적응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시설

첨단산업 개발계획 변경 절대 안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흙을 확보해 놓고도 운반할 비용이 없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성토작업이 여의치 않을 경우 당초 계획보다 높이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여기에다 첨단산업단 준공 시기도 올해 10월에서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입주 예정인 기업들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LH는 광주시 북구 첨단산업 1단계 매립지와 2단계 조성사업에 필요한 흙 133만㎡ 가운데 73만㎡를 확보하고서도 35억원의 운반비를 마련하지 못해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것이다. LH는 광주시에 운반비 부담을 요청했으나 시가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난색을 표명하자 광주시와 맺은 준설도 공급 합의마저 파기했다고 한다.

첨단산업단 개발계획 변경 절대 안 된다. 광주시와 입주 예정 기업들의 반발은 거세다. 더욱이 운반비와 흙 운반이 풀리지 않자 성토 높이를 계획보다 1m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발상 자체가 '치졸'하다. 첨단2산업단은 예전에 논의했던 지역으로 지대가 낮고 인근에 영산강이 흐르는 만큼 성토 높이를 낮출 경우 침수 피해는 불보듯한 일이다. 그럼에도 LH가 조만간 성토 높이 변경과 공사기간 연장 등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니 분노마저 치민다.

사실 LH의 재정난은 세종시 등 정책적 사업을 떠안은 탓이 크다. 여기에 '부동산 불패 신화'를 믿고 방만한 사업과 무리한 경영을 해온 것도 일조를 했다. 이러한 책임을 산단 조성의 차질도 떠넘기는 것은 공기업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변경안을 당장 철회해야 하는 이유다.

청소년 '통신범죄' 차단할 대책 세워야

청소년들이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에 대단히 취약하다고 한다. 성적 호기심에 휴대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친구나 후배 등에게 음란한 동영상 또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전과자로 전락하는 10대 청소년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 등 관계기관에서 사전 교육을 통해 이를 예방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다.

통신매체를 통한 범죄는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음란 동영상 등을 다운받은 뒤 이를 특정인에게 보내거나 휴대전화로 몰래 찍은 사진 등을 인터넷에 올리는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 들어 음란 동영상 및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 경찰에 적발된 청소년이 1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음란물 전송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 대부분이 범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는 점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

물론 이들은 청소년인데다 초범인 점을 감안해 모두가 불구속 입건됐지만 본인은 물론 가족의 입장에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호기심으로 재미삼아 한 것이 평생 전과자의 낙인을 달고 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 모두는 어른들의 책임이 크다. 각종 유해사이트가 난무하는 등 그릇된 생활위와 성 인식을 심어준 게 바로 어른들이 아닌가. 학교에선 음란물 전송이 '큰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줄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마련, 청소년들을 상대로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게 최선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가정에서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는 물론이다.

신임 차관급 프로필

육동한 국무차장

거시경제정책에 능통한 정통 경제 관료. 행사 24회로 관직에 입문해 옛 경제기획원, 기획재정부에서 경제정책 분야에 오래 몸담은 거시정책 전문가로 꼽힌다.



▲강원 춘천(51) ▲한양대 경제학과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국무총리실 국정운영실장

안상근 총리실 사무차장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대학 1년 후배이자 오랜 정치적 동반자다. 김 후보자의 도지사 시절에 경남도 정부 특별보좌관과 경남발전연구원장, 정무부지사 등을 지냈다.



▲경남 함천(47) ▲서울대 ▲창원대 겸임 교수 ▲가야대 대학협력 부총장

김해진 특임차관

경향신문 정치부장 출신으로 기획력과 친화력이 뛰어나며 주관이 뚜렷한 외무 내각형. 이재오 특임장관의 핵심 측근으로 분류되며, 지난 7·28 은평 재선거에서도 선거 참모로 활약했다. ▲경남 밀양(49) ▲부산대 독문과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후보 인문특보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감사



류성결 기획재정부 2차관

행사 23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예산과 재정, 공공정책 분야에서 잔뼈가 굵았다. 현 정부 들어 예산총괄 심의관에 이어 예산실장을 맡아 나라 살림을 꾸리면서 경제 위기 극복에 기여했다. ▲경북 안동(53)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박사 ▲기획예산처 균형발전재정기획관 ▲공공정책관



설동근 교과부 1차관

제12, 13대 부산시 교육감에 이어 2007년 첫 직선 교육감에 당선돼 부산은 물론 전국 교육계의 혁신을 주도했다.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교육혁신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경남 의령(62) ▲동아대 대학원(행정학 석사) ▲제12·13·14대 부산시 교육감



김창경 교과부 2차관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청와대 과학비서관을 맡아 현 정부 후반기 교육과학기술부 업무의 연속성을 이어갈 책임자란 평가를 받는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 내정자와도 2년 가까이 호흡을 맞춰왔다. ▲서울(51) ▲미국 MIT 재료공학박사 ▲한양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대통령실 과학기술비서관



이준규 외교안보연구원장

외교부 내에서 '해결사'로 통한다. 굳은 입을 마다하지 않고 조직 내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직접 나서 '돼도난다'식으로 명쾌하게 해답을 내놓는 스타일이다. 탈북자 문제를 처리하는데 선구적 역할을 했다. ▲충남 공주(56) ▲서울대 법대 ▲뉴질랜드 대사 ▲대테러국제협력 대사



김남석 행안부 1차관

업무 추진력이 좋으면서도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에서 신망이 두터운 외무 내각형이다. 2008년 현 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로 바뀔 때 기획조정실장을 맡아 행안부의 기틀을 잡았다. ▲강원 삼척(53) ▲한양대 행정학과 ▲행자부 정책홍보관리실장 ▲행안부 기획조정실장



안양호 행안부 2차관

행안부뿐 아니라 청와대, 중앙인사위,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거치며 풍부한 행정 경험을 쌓았다. 차분하면서도 치밀한 성격으로 한번 맡은 일은 철두철미하게 처리하는 스타일이다. ▲경북 김천(53) ▲고려대 행정학과 ▲행자부 기획예산담당관 ▲경기도 행정1부지사 ▲국민권익위 상임위원



이용걸 국방차관

예산·재정·공공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현 정부 첫 예산실장으로 예산정책의 기틀을 닦는데 이어 기획재정부 2차관을 맡아 재정 조기 집행을 챙기면서 경제 위기 극복의 숨은 공신으로 평가된다. ▲부산(53) ▲서울대 경제학과 ▲기획예산처 기획총괄과장 ▲공공혁신본부장



김영후 병무청장

군수분야의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군수 전문가로 통한다. 인품과 업무, 어학 능력이 뛰어나고 꼼꼼한 성격으로 업무 장악력이 탁월해 병무행정을 개혁하는데 적임자로 꼽힌다. ▲목포(59) ▲육사31기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 ▲국방부 주한 미군 기지지원 사업단장



장수만 방위산업청장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국방획득체계 개선을 주도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선거운동시절부터 강만수 경제특보와 함께 'MB노믹스'의 열거를 만들었다. ▲부산(60) ▲미국 브라운대 대학원 경제학과 ▲재정경제부 공보관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청 초대청장



모철민 문화체육 1차관

문화·관광 쪽에서 뼈가 굵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성품이 온화하면서도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다는 평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국 프로젝트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국제기구 경험도 쌓았다. ▲서울(52) ▲성균관대 경영학과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국장 ▲국립중앙도서관장



박선규 문화체육 2차관

방송기자 출신으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둔지 한 달 만에 정부에 복귀하게 됐다. 지난 1999년 KBS 정치부 기자 시절 서울시장에 뜻을 뒀던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 맺었다. 이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몇 안 되는 인물로도 꼽힌다. ▲전북 익산(49) ▲고려대 졸업 ▲청와대 언론2비서관, 대변인



김재수 농식품부 1차관

농정 및 유통 전문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주미 대사관 농무관으로 근무하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농안분야 협상을 현장에서 지원해왔다. 농식품의 산업화를 위한 농업기술 혁신에 관심이 많다. ▲경북 영양(53) ▲중앙대 경제학 박사 ▲농림부 식량정책과장 ▲농촌진흥청장



정 승 농식품부 2차관

'이명박 정부' 출범 뒤 농식품부에 신설된 식품산업 본부장을 맡아 농정과 식품산업을 접목시키는데 기여했다.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초대원장을 맡아 김치 세계화에 공을 세웠다. ▲안동(52)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행정대학원 ▲농림부 농촌정책국장 ▲세민금융그룹 정책특보



민승규 농촌진흥청장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면서 비(非) 인기가이인 농업분야를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민간 농업 전문가. '돈 버는 농업'과 '농업 최고경영자 10만명 양병실' 등 농업의 산업화가 지론이다. ▲서울(49) ▲일본 도쿄대 농업경제학박사 ▲농림부 양곡유통위원 ▲농식품부 1차관



박영준 지식경제부 2차관

이명박 정부의 '창업 공신'이자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이상득 의원 보좌관을 맡다가 서울시 정부보좌관에 임명되면서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경북 칠곡(50) ▲고려대 법학과 ▲안국포럼 조직특보 ▲대통령 기획조정비서관



최원영 보건복지부 차관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복지, 기획 업무를 두루 거친 정통 복지관료로 보건의로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꼽혀왔다. 원만한 성품에 화합형 인사로 꼽힌다. ▲경남 창원(52) ▲연세대 사회복지학박사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장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



정창수 국토해양부 1차관

국토해양부 안팎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쳐 경질 것이 많은 국토부 제1차관으로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보관과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면서 대인론, 대국회 업무도 원활하게 처리하는 등 대인 관계가 폭넓다. ▲강원 강릉(53) ▲성균관대 행정학과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김희국 국토해양부 2차관

기획력이 뛰어나고 업무를 끝고 나가는 추진력도 겸비한 것이 인정돼 4대강 살리기추진본부 부본부장에 올랐으며 현정부 최대 역점사업인 4대강 사업의 집행실무를 무난히 처리해 왔다는 평가다. ▲경북 의성(52) ▲경북대 행정학과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기획단장



한만희 행정도시건설청장

주택과 토지,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로, 선후배간 신망이 두터웠다.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맡아 현 정부의 친서민 핵심 정책인 보금자리주택의 산과 역할을 했다. ▲충남 청양(54) ▲영국 버밍엄대 도시지역계획학 박사 ▲국토해양부 국토정책국장 ▲주택토지실장



법원 "타임오프 한도 고시 무효 아니다"

법원이 근로시간제한(타임오프) 한도에 위반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지난달부터 시작된 타임오프제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이인형 부장판사)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8명이 타임오프 한도 고시가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시간제한 심의위원회가 노조법 부칙에 명시된 4월30일을 넘겨 한도를 결정한 것,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권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국회의 의견을 듣지 않았더라도 의결 자체를 위법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光 卍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 金鐘元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錫喆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어촌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경부 2200-612	체육팀 2200-697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사진부 2200-693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16	조사부 2200-571	(F A 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전산팀 2200-685	(F A X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